

확대된 권한으로 전북 자치 위상 '쑥쑥'

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 자치권 강화

행정·교육서비스 향상으로 전북 이탈현상 감소 기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 설치로 자치감사 전문성 확보

전북이 전북자치도로 전환되며 대한민국의 독자권역의 지위를 인정받은 지방정부로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란 위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이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는 중앙에서 이익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행정·교육서비스의 향상과 체계화를 이룬 다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창원과 청주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

또한, 전북자치도 전환에 맞춰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투표 제도도 실시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20에서 1/30으로 대폭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크게 확대했다.

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율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의 학교가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받은 학생 또한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북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환(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와 연계해 입학 자격을 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게 됐으며, 이외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됐다.

특례를 통해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 자율권, 지역인재 선발제용

확대 등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행정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 도정의 성공적 발전을 이끌 '재복'들을 모으겠다는 복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북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를 설치하고, 도와 도교육청 등 전북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북자치도 출범을 통해 당장은 와닿지 않지만 자치권 관련 특례 반영이 점진적인 자치 행정서비스 성장과 위상 강화로 뚜렷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전북자치도가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 높은 특례도 마련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다중이용시설 점검

전북도, 15일부터 31일까지 터미널·전통시장·요양시설 등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전통시장, 터미널, 요양시설 등에 대해 15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터미널,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14개소를 도에서 표본 점검하고 시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 점검을 위해 건축·전기·가스·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안전관리 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으로 꼼꼼하게 분야별로 고강도의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극심해진 폭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의무가 됐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성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기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 계단 등 물건 적치상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위 기간동안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10개소에 대하여, 도, 시군,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서 개선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해 해당 사항이 조치 완료될 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더욱 세밀한 점검을 통해 도민과 우리 도를 찾는 내방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권역별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권역별 의견 수렴

전북도가 오는 16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시·군 관계 공무원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오전·오후 각 1회씩 개최될 예정으로 동부권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강당, 서부권은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

립·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환,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도'라는 비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해 국가 계획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부문별 감축사업 실행을 위해 에너지전환·산업 10개, 수송 8개, 건물 11개, 농축산 20개, 폐기물 9개, 흡수원 6개, 정책기반 8개

등 7개부문 72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력했다. 더불어 에너지전환, 농생명융복합, 바이오융복합, 생태계서비스, 친환경자원순환 등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5대 선도 전략'을 마련해 특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간 탄소중립 포럼, 도민설명회, 찾아가는 직능·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충분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향후 기본계획(안)을 완성한

뒤 1월 말경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 계획의 부문별 사업에 대해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극심해진 폭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의무가 됐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성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다.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지자체의

주력산업 등과 연계,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3년간(2024년~2026년)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은 주력산업인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이 이 사업에 선정돼 2024년도 정책자금과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등 208.3억 원 규모, 107개 내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전북도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소재한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해당 기업으로, 신청제의 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2월 8일까지 전북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md.jtsp.or.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선정 절차는 2월 중 외부 전문가의 사전검토와 서면평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기업

전용)'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계획에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전북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md.jtsp.or.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지원사업별 지원일정, 지원조건 등 상세내용은 올해 3월 중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2024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도가 15일부터 도내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지원규모를 3,000명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329명, 군산 437명, 익산 479명, 정읍 143명, 남원 101명, 김제 109명, 완주 159명, 진안 25명, 무주 25명, 장수 22명, 임실 28

명, 순창 30명, 고창 56명, 부안 57명이다.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18~39세)이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홈페이지(td.lezwel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2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